

‘북 2차 핵실험’ 무엇을 노렸나

# 핵보유국 지위 굳혀 美와 직거래

## 對美 협상 핵군축 구도 전개 속셈

## 김정일 후계자 관련 내부 단속도

북한이 25일 전격적으로 2차 핵실험을 단행한 것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굳힘으로써 향후 대미 협상을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군축 협상의 구도로 전개하려는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핵실험은 지난달 29일 북한이 위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엔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의장성명 등 조치에 대해 즉시 사죄하지 않으면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하겠다’고 예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북한은 2006년 10월9일 1차 핵실험 때 관련 준비를 이어가다 6일 전인 10월3일 공식적으로 핵실험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에도 지난달 29일 예고한 바와 같은 유엔의 사과를 핵실험의 전제로 한 대외 위협성 발언의 성격이 강했다.

즉 당시 북한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염두에 두고 핵실험을 공식 예고한 것으로 본 이들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핵실험은 전격적이고도, 신속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큰 틀에서 이번 핵실험에는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정책 기조를 조기에 확정해 북·미 양자대화의 무대로 나오도록 촉구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더해 북한이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미국과의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핵실험으로 내달린 데는 인도, 파키스탄 등과 같은 ‘중·저위험 핵보유국(핵확산방지조약 체제 밖에서 핵을 개발한 나라)’의 지위를 확보한 뒤 북미 협상을 핵군축 회담 구도로 끌고 가려는 속내도 담겨 있다고 볼 여지가 적지 않아 보인다.

즉 협상을 할 때 하더라도 그에 앞서 자신

들이 보일 수 있는 무력 카드를 다 꺼냄으로써 ‘몸값’을 높여 놓은 상태에서 하겠다는 계산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이 이처럼 고속도로를 질주하듯 ‘초강수’ 정책을 신속히 취해 나가는 것은 북한의 내부사정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추정도 제기되고 있다.

건강 이상설에 시달리고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강성대국으로의 진입을 예고한 2012년까지 후계자에게 견고한 권력 기반을 물려 주기 위해 서두르는 기색이 엿보인다는 분석이다.

특히 강성대국 진입을 예고한 2012년이 현 미국 오바마 행정부 임기 마지막 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때까지 대미 협상을 통해

체제의 안전판 격인 북·미 관계 정상화를 달성하겠다는 의도 아래 ‘속도전’을 펴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핵보유국의 지위를 굳힌 상태에서 대미 협상에 나서려는 북한의 속내에는 기존 6자회담 합의에 거론된 경제 지원,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의 반대급부 이상을 원하는 ‘야심’이 담겨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즉 향후 북핵 문제를 둘러싼 양자 또는 다자 협상이 진행될 경우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대(對) 한국 핵우산 제공 공약 폐지 등이 전제되지 않는 한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ICBM 시험발사 추진 대미 안보 위협 극대화

■ 다음 카드는 ...

북한이 25일 전격적으로 제2차 핵실험을 하고 나섬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조치가 불가피해졌고, 북한은 늘 되뇌어 온 것처럼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맞설 것으로 보여 국제사회의 ‘북한 스트레스’ 지수가 악화일로로 걸을 전망이다.

국제사회의 제재에 북한이 빠들 후속패로는 우선 지난달 29일 북한 위무성 대변인 성명이 “추가적인 저위력 조치”로 예시한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 가운데 남은 ICBM 발사시험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4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서 이미 추가로 로켓을 만들어 놓았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번엔 2006년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때처럼 아예 ‘인공위성 발사체’라는 모험을 벗어던지고 노골적으로 ICBM 시험발사를 추진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북한은 이에 더해 자신들의 불투명성을 최대한 활용,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만큼 소형화하는 데 성공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면서 ICBM 발사를 추진함으로써 대미 안보 위협 효과의 극대화를 노릴 수도 있다. 북한은 2006년 첫 핵실험에서 2kg의 플루토늄을 사용해 4kt의 폭발력을 얻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져 이미 핵탄두의

소형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한 대북 전문가는 “일단 이번엔 관측된 진도로 보면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 지위를 얻을 수 있을 만한 폭발력을 보여준 것 같다”며 “앞으로 핵무기 소형화와 진전된 ICBM기술 확보를 통해 자신들의 역지력을 과시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북한이 이번 핵실험보다는 작은 규모의 폭발력을 보여주는 실험으로 핵무기 소형화의 진전을 보여주려 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북한 위무성 대변인 성명에서 밝힌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개발의 본격 착수도 북한이 사용할 수 있는 후속패다. 당시 성명은 “경수로발전소 건설을 결정하고 그 첫 공정으로서 핵연료를 자체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체없이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수로 발전소에는 저농축 우라늄이 연료로 사용되는 만큼 북한은 핵의 평화적 이용을 주장하면서 우라늄 농축을 공식선명하고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다.

북한의 농축기술 수준과 시설에 대한 회의론이 있기는 하지만, 북한이 우라늄 농축에 본격 나서면 플루토늄과 달리 손쉽게 무기로 전용 가능한 핵연료를 확보하게 된다는 점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에 대한 충격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 폭발력, 최고 20킬로톤 달해

리 국방부 보도

러시아 국방부는 북한의 2차 핵실험의 폭발력이 최고 20킬로톤(kt·1kt는 TNT 폭약 1천t의 폭발력)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25일 이타르타스 통신 등이 보도했다.

국방부 고위 관리는 이 통신에 “우리의 감시 시설이 북한 영토 내에서의 지하 핵폭발을 확인했다”며 “2006년 1차 핵실험 장소와 같은 곳에서 이뤄졌으며 이번 핵실험은 20킬로톤에 이르는 폭발력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터파스와 리아 노보스티 통신 등 다른 언론은 국방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 이날 오전 4시54분 41초(현지시간)에 기록된 핵 폭발 감시 시스템에 10~20킬로톤에 상응하는 지하 핵실험이 관측됐다고 보도했다.

2006년 1차 핵실험 당시 북한은 당초 4킬로톤의 폭발력을 기대했으나 최대 0.5킬로톤에 그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투하된 핵폭탄의 위력은 15킬로톤과 22킬로톤 정도였다. 이와 관련,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이번 핵실험은 폭발력과 조종기술에서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안전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美 오바마 대통령 “무모한 도전” 비난

# 중국 통해 사전 인지 가능성 높아

■ 국제사회 일제 성명

북한이 25일 두 번째 핵실험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되자 국제사회는 일제히 북한에 대한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긴급회의의 일정을 조율하는 등 긴박하게 대응하고 나섰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발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도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함께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노골적으로 반항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직접적이고 ‘무모하게(recklessly)’ 국제사회에 도전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성명은 미국 현지 시각으로 25일 새벽에 발표된 것으로, 극히 이례적인 것이다.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만나 북한의 핵실험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비난하면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되면 북한에 대한 제

재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6자 회담 참가국 중 하나인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북한 핵실험 소식에 대해 “당연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핵실험 관련 정보를 분석 중이며 이후 적절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도 성명을 통해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것은 물론 북한의 안보를 위해서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국제사회가 북한을 동반자로서 대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6자회담 참가국의 하나인 일본은 유엔 안보리에 긴급회의의 소집을 요청했다.

이는 다카스 유키오(高須幸雄) 유엔 주재 일본 대사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러시아 언론들 역시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말을 인용, 안보리가 25일 오후 (한국시간 26일 새벽)에 긴급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 정부는 알고 있었다

북한이 25일 오전 핵실험을 강행한 것과 관련, 정부가 이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20분 전에 핵실험 계획을 중국에 통보했으며 중국 측은 자국내 한국, 미국, 일본 대사관에 이 정보를 전달, 우리 정부도 사전에 인지했다. 이런 전례를 감안하면 정부 당국은 이번에도 북한의 핵실험 전에 중국을 통해 관련 사실을 사전 인지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 전에 중국 측에 핵실험 실시와 관련된 내용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의 반응 등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북한의 핵실험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외교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함경북도 길주에서 인공지진파가 감지된 직후 핵실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난 처음 듣는 얘기”라

는 반응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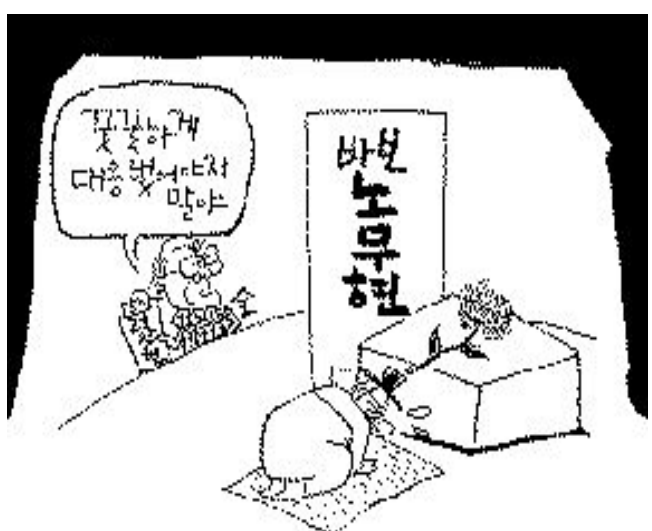
군당국의 한 관계자도 “핵실험 이전에 미국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서 “우리 정부가 오히려 미국에 지진파 포착 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오늘은 공교롭게도 미국의 현충일로 공휴일이어서 정부 당국간 채널 기능이 쉽지 않다”면서 “이 때문에 정보 공유가 미흡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당국이 한반도 안보 뿐 아니라 동북아 안보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정보를 주변국가와 사전에 공유하지 못했다면 대북 정보공유에 심각한 허점을 노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더욱이 핵실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중국 측이 우리 정부에 이 사실을 통보해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과의 대북공조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 빛의 만평

- 김중두



낮 두꺼운 분이나 천년 만년 사세요

# 깊은 바닷물 퍼올려 적조 없앤다

남해수산연구원 ‘저층수 펌핑 시스템’ 개발

매년 여름이면 남해안을 휩쓸면서 양식업자들에게 막대한 타격을 입혀온 적조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이 개발됐다.

25일 국립수산물연구원 남해수산연구소(소장 손상규)는 “양식장에 발생한 적조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저층수 펌핑 시스템’을 개발, 적조피해 발생 재로화를 실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남해수산연구소는 유해 적조생물에서 새로운 기능성 물

질을 추출해 웰빙식품으로 개발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양식장의 적조를 감소시키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용성을 인정받은 남해수산연구소는 지난 3월 특허등록을 마치고, 일부 시스템을 보완해 조만간 양식장에 직접 설치할 계획이다.

“저층수 펌핑 시스템”은 코롤로디니움과 같은 유해 적조생물이 영양 염류가 풍부하고 수온이 높은 해수면 표층 부근에서 대량 증식하는 점

에 착안해, 적조생물이 없고 수온이 낮은 저층수를 표층으로 분출시켜 적조생물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증식을 억제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이 가두리 양식장에 설치되면 유해성 적조가 발생하더라도 양식장이 있는 일정수면은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남해수산연구소는 또 유해성 적조생물인 코롤로디니움 이 지니고 있는 유용한 지방산을 추출, 이를 염류가 풍부하고 수온이 높은 해수면 표층 부근에서 대량 증식하는 점

이 기술은 성인병 예방에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을 코롤로디니움에서 추출해 정제하는 기술로, 향후 엄청난 부가가치를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

어업자들과 박종화 과장은 “오메가-3지방산은 고등어·전갱이 등과 같은 등푸른 생선에서 추출해 활용했으니, 앞으로 코롤로디니움 적조생물을 이용하게 되면 적조 퇴치는 물론 머지않아 적조생물도 유용한 자원으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수=박양규기자 ykpark@

# 300만원 이상 벌금형 받아도 공무원 퇴출

이르면 하반기부터 공무원들이 뇌물·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퇴출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최근 공직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복지 예산 등의 횡령과 금품수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26일 입법에 고한다 밝혔다. 행안부는 국가 및 지방 공무원이 뇌물이나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별도 절차 없이 공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했다.

현행 법은 공무원이 범죄와 관련해 금과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